

지능형 보험사기 활개 피해예방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 5년간 6,302명 검거 사기알선·권유자 처벌 근거 전무 “현행법 개정·시민인식 개선돼야”

#1. 최근 전역한 A씨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SNS에 배달원 고용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일을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이들은 기해자, 피해자,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 접촉사고를 150건 일으켜 보험금을 나눠갔다.

#2. 평소 무직으로 생활하던 B씨는 2개월 사이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추간판장애’ 등의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하며 약 5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하는 수법을 통해 현장조사 등을 회피하며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했다.

9,434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을 개정해 사기 알선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자 처벌 근거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조치 요구·자료제공 요구권 신설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장이 금감원·건보공단·보험업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험범죄 방지 정부합동 대책반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는 “민간조사 분야인 탐정법안을 법제화시켜 보험사기 분야만큼은 증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허위 사고 조작·입원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으면 보험사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은 지속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 중이다.

광주·전남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고액 자동차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한방병원 수가 많이 줄어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적발되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며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 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임채민 기자

광주·전남지역에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사기 적발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보험사기로 검거된 건수는 2,280건으로 검거인원 6,302명, 피해금액은 1,42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지역은 검거 건수는 285건, 검거인원 747명, 피해 금액 69억원이며, 전남은 검거 건수는 70건, 검거인원 242명, 피해 금액은 21억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생계형에서 경기침체, 구직난 등이 가중되면서 조직, 전문화되는 추세이다. 미성년자들도 보험사기 가담하는가 하면, 범죄 종류도 상해, 질병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보험사기에서 자동차 몰탈·인피사고와 관계없는 허위입원, 수리를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설계사 병원 관계자 등 전문 인력까지 범행에 가담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애먼 보험금 누수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이며, 지난해는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하루 동안 724명이 신종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광주313명, 전남 411명이며,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는 전남에서만 8명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과 비교해 280명 증가했다.

/임채민 기자



4·19혁명 최초 논의 장소 기념석 제막식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린 ‘4·19혁명 최초논의장소 기념석 제막식’에서 임택 동구청장, 이홍길 4·19혁명 참여자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석을 살펴보고 있다. /김생훈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소송 2심도 패소

1심은 시효 지나 청구권 소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5-1부(이현우·채동수·송영승 부장판사)는 7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인 고장환부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과 같이 소멸 시효가 지나 손

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기관사로 일하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전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형이 집행됐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2020년 7월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장씨

가 사망했으므로 장씨가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일수입)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일일수입 청구의 경우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당시 손해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한 청구 역시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4년 1월 국가가 유족에게 1억4,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연합뉴스

금속노조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촉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진상 규명과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한 생산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사업주와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가 사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중대재해다”며 “산업안전보건법 38조(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에 따르면 기계

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사업주는 기계의 기동장치를 잠그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갑자기 가동될 우려를 막기 위해 작업지휘자를 공정에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해당 사고의 책임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과 동행하겠습니다

중간소음 에어블럭 (BO-30)

보온 에어단열재 (BO-30A / BO-30B)

2개의 공기층으로 층간 소음이 방지되는 혁신적인 단열기술!
3개의 공기층으로 방음 효율을 높이는 기술!!
조달청 물품 식별번호 : 24267332

대표이사
김 흥 연

(주)한일파이프 (주)한일보온 www.보온.com

TEL 062_365_5577~8 FAX 062_365_558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1 광주광역시 서구 미륵로 16

E-mail : hanil5577@naver.com